“방사광가속기, 국가대형연구시설 전무한 호남으로 와야”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 건의문

전국서 호남만 가속기 없어
정부 평가지표 재조정 요구
전남 유치 한목소리 힘 실어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오섭 · 윤재갑 · 이용빈 · 양향자 · 이병훈 · 김승남 · 송갑석 당선인,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 · 이개호 · 신정훈 · 김원이 · 주철현 · 소병철 · 김회재 당선인.

호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15 총선이후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공모 방침에 따라 충북, 강원, 경북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남도는 광주시와 전북도까지 끌어들여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유치전에서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다. 철도, 도로, 항구 등 국가기반시설을 제외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전체가 대응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공모 결과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한전공대와 함께 지역의 미래첨단산업에 필수시설인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호남권의 지자체, 대학, 지방의회, 교수, 학생, 기업, 단체, 과학인 등의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부지의 확장성 및 안전성,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 가능성, 한전공대와의 시너지 잠재력 등을 강조하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며, 호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 지역정치권은 국토 균형 발전과 산업화 시대 배제된 호남 차별의 시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당선인들이 23일 채택·발표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이 국토 균형 발전과 기득권 타파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선인들은 건의문에서 먼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위대한 선택을 했다. 민심은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새 시대를 요구한다”며 “기득권, 성장제일주의, 수도권 및 특정 지역 편중 등 구시대 패러다임은 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권에는 가속기를 비롯해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대다수가 충청·영남권에 편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영남권에 소재한 포항공대는 총2기(3세대 원형, 4세대 선형)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 중이며, 경주는 양성자가속기, 대전은 중이온가속기, 부산은 중입자 가속기를 운영 중이다. 반면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 첨단 연구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부지 선정 기준이 수도권 인접 지역에 기울었다는 ‘불공정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선인들은 평가지표 재조정을 요구하며 정부 당국을 압박했다.

정부의 부지 선정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시설 접근성 ▲현 자원 활용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인구 등) 등 위치·접근성 위주로 짜이면서 사실상 수도권이 가까운 충청권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당선인들이 ‘호남인들의 염원을 담아 건의한다’고 건의문에 명시한 점도 후폭풍 차단을 위해 부지 선정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기부의 부지 선정 평가 지표 공개 당시만 해도 수도권 인접 지역에 유리하게 짜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쳐졌다”며 “부지 선정을 앞두고 호남권이 똘똘 뭉쳐 정부에 호남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당선인들이 한목소리로 유치전에 힘을 실으면서 전남도의 유치전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전남 나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4곳이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실무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우선협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대형연구시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의료·바이오·에너지·소재 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2022년부터 국비 8000억원 등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64.3%…18개월만에 60% 돌파

리얼미터 여론조사
민주당 52%·통합당 27%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긍정 평가)가 수직상승하며 1년 6개월만에 6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2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0%포인트 오른 64.3%(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22.7%)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9월 4주차(65.3%) 조사 이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60%대를 넘긴 것은 2018년 10월 3주차(60.4%)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5.6%포인트 내린 32.0%(매우 잘못함 18.5%, 잘못하는 편 13.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줄어 3.8%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2.2%→65.1%)과 부산·울산·경남(51.8%→62.5%)에서 두자릿수 상승을 보였고 경기·인천(59.9%→66.4%), 대구·경북(43.4%→46.6%) 등지에서도 올랐다.

60대 이상(49.4%→58.6%), 50대(59.3%→67.3%), 40대(69.7%→74.9%), 30대(64.8%→68.5%), 20대(52.7%→54.7%) 등 전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5.3%포인트 오른 52.1%로 집계됐다. 2018년 6월 3주차(54.1%) 이후 22개월 만에 50%대로 올라섰다. 진보층(73.2%→79.5%)과 중도층(42.9%→46.9%) 등에서 상승했다. 미래통합당은 0.5%포인트 내린 27.9%로 4주 연속 30% 선을 밑돌았다. 다만 보수층(62.0%→69.3%) 지지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1.1%포인트 하락한 4.9%였고, 정당지지도 조사에 새로 포함된 열린민주당은 3.3%를 보였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1.6%포인트 내린 2.8%, 민생당은 1.2%포인트 하락한 1.3% 등이었다. 무당층은 0.2%포인트 줄어든 5.4%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0.2%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8.9%였다. 모름·무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긴급재정명령권도 검토

자발적기부 전국민 지급안 중재
4월 임시국회 합의 가능성 커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3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재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 19 후폭풍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최대한 지원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챙기고 있다”며 “특히,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지원금에 ‘긴급’이 붙은 만큼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공약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부담이 당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에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공이 여야 협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청와대에 ‘광주형 일자리’ 해법 지원 요청

황덕순 일자리수석 면담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 이탈로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해법 모색을 위해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3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청와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추진 근간이 되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인 광주시,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노동계 사이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뚜렷한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 등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들도 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면서, 광주지역 사회에선 청와대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